파업 만능주의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LG-Caltex정유 노동조합이 2003년 임금 ·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8월7일 파업을 결정함으로써 정유기업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유는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파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나, LG정유 노조는 국가가 경영하는 필수공익 사업장인 철도도 파업하는 판에 사기업인 정유가 파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휘발유, 중유, 경유, 벙커C유는 물론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생산까지 차질을 빚음으로써 또 다른 물류대란에 이어 또한번 에너지 공급차질, 석유화학 가동률 감축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산업 마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G정유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임금 11.2%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은 물론 자동승진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회사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노조 전임자 확대 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정유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실질 인상률이 13.92%로 월평균 인상액이 27만5000원에 달해 현대자동차의 9만8000원(8.63%)이나 민주노총 인상요구액 15만8661원(11.1%)보다 월등히 높고, 경영참여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LG정유는 각종 수당과 학자금, 복리후생비 등을 합하면 2002년 1억원 이상 받은 고졸 생산직 근로자가 3명, 9000만원 이상자가 20명에 달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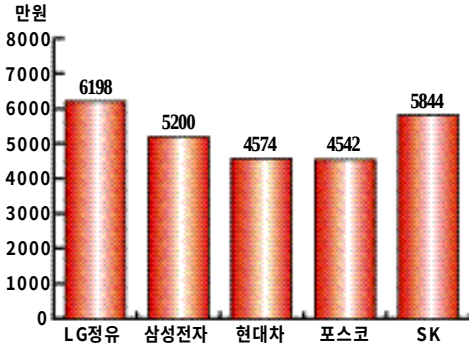
LG정유의 임금수준은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 타이완 등 한국 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의 정유기업 임금보다 높고 일본 수준에 근접한 상태로 심각한 대외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LG정유 뿐만 아니라 전자, 자동차, 금속, 정유, 석유화학기업의 임금수준은 이미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아시아 국가를 추월해 일본에 거의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아마도 주5일 근무와 경영참여가 파업의 진짜 목적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공한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 경영참여 허용, 유럽식 모델 등 노동쟁의 단초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도 2002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2001년보다 5.9% 증가하면서 1996년 이후 최대를 나타냈다. 한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1996년 3.5%, 1997년 -7.1%, 1998년 -10.2%, 1999년 -4.4%, 2000년 1.9%, 2001년 5.2% 등으로 2001년 급격히 상승한 반면, 2002년 미국(-1.3%), 일본(-4.5%), 타이완(-8.8%) 등은 감소했다. 환율효과를 감안해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위노동비용도 무려 9.3% 증가했으나 미국(-1.3%)과 일본(-7.4%), 타이완(-7.9%) 등은 모두 감소했다.

한국은행도 중국경제 부상과 우리나라 산업정책방향 보고서에서 1986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이 월 1031달러로 중국의 53달러에 비해 19.9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평균 임금상승률 역시 한국이 11.0%(달러 기준)로 중국(7.8%)보다 높았다.

LG정유의 임금수준 비교(2002)



2001년 한국의 평균임금은 1319달러로 중국(98달러)의 13.4배였고 해안지역과 비교해도 9.4배를 나타냈다. 한국과 중국의 임금격차는 1986년 10.4배, 1990년 23.1배, 1994년에는 30.7배까지 확대됐으나 차츰 좁혀져 외환위기 다음해인 1998년에는 12.9배로 축소됐다. 그러나 격차가 다시 벌어져 1999년에는 15.8배, 2000년 16.1배로 확대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중국 현지 제조인력의 생산성은 한국과 맞먹거나 50% 수준이지만 임금은 한국의 8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대기업의 노조들은 스스로가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 회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가 왜 이 지경으로 전락했는지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파업 만능주의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3/8/18>